등원 딜레마 민주, 선진당에 '러브콜'

특검제·검찰개혁 특위 주장 공통점

'창심' 이용 與 압박 정국 주도권 선점

6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좀처럼 등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느슨한 연대'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은 이념적 간극이 넓은 데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갈등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및 차기 대선에서 호남권(민주당)과 충청권(자유선진당)의 연대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설익은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자유선진당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의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나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검 도입과 검찰개혁특위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로 내건 5가지 선결 요건 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4일 공개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나름대로 원칙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발언으로 특검 주장에 탄력이 붙으면서 한나라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또한, 이 총재가 "국회는 무조건 열어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의 '선(先) 상임위 개최'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버틸 명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자유선진당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는 등 특검 도입 등의 필요성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총재의 특검 도입 발언이 있었던 14일에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자유선진당 5역에게 "앞으로 더 힘을 합치자"며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관계 개선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대여공세 국면에서 국조와 특검,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 카드 등을 꺼낼 때마다 선진당은 대부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양당간에는 긴장관계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예산 처리 과정에서 터져나온 '한나라당 2중대 발언' 공방으로 양당간 신경전은 극에 치닫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 간의 연대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까지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통해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기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의 분열 등으로 전체 판이 흔들린다면 과거 DJP 연대처럼 극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정당 간의 이념적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주요 법안별 입장차도 뚜렷해 근본적인 연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놓고 자유선진당과 사실상 느슨한 연대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치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웃고는 있지만 … 한나라당 안상수(오른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Club 창립기념 양당 원내대표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효석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 추진

"광주시장 출마 검토 안해"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김효석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풀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쇄신파 및 민본, 친박(친박근혜)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촉구 결의안에 서명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 출마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뉴 민주당 플랜을 완성시켜 민주당의 재집권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하며 "지방선거 이후에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임동욱 기자 tuim@

"北 2차 핵실험은 남·북·미 책임"

박지원 의원 밝혀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5일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포기해야 된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적절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여권의 강한 반발을 부른 김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에 대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나 서민경제나 남북관계에 위기를 초래하고 적절치 못한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 "이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는 9·19 합의를 어기고 미국, 일본이나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네오콘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또 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파국의 책임을 분명히 가리자고 하면 한국과 미국과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도 3자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9·19 합의 준수 선언을, 이 대통령에게는 6·15, 10·4 인정 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시정·도정 질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5일 각각 시정·도정질문을 벌이고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2년째 '낮잠'

○…광주시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만든 '갈등 관리 조례'가 2년째 관련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이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선정 등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나, 정작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조차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민주·광산2)은 15일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지난해 제정한 '광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1년 6개월 넘게 구성하지 않아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규정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그러나 도청 별관은 국책사업으로 시에서 갈등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2015 U대회 2013년 '복사판'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15 U대회) 타당성 조사가 2013 대회 조사 보고서의 표지만 바꾼 '복사판'으로 확인돼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2015대회와 2013대회는 경기장 건설이 1천831억원에서 997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차이를 보이는데도 경제효과 분석 결과는 똑같다"며 "이는 2015대회 타당성 조사가 2013대회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하계U대회 개최의 딴죽걸기가 아니라 이제라도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며 "보다 전문연구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정확히 따져보면서 대회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의 이같은 시정질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다분히 정치적 문제 제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소홀

○…광주시가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 사업에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이정남 의원(민주·광산3)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농촌 지원대책이 전남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농촌 지원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남도가 농촌지원 대책에 근거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100%를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한 것과 비교된다.

"컨부두공단 부채 승계 못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5일 "내년 초 출범하는 광양항만공사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존 부채를 승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의에서 "현재 광양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단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단이 가진 부채를 항만공사가 그대로 갖고 가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부채승계에 강하게 반대했다.

광양항의 항만공사 출범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전남도가 인사권과 재정권의 자치를 보장받는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항만자치의 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 피해 대책 촉구

○…전남도의회 강우석(민주·영암)의원은 15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지역에 668곳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태양광으로 인한 축산·과수·채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진군 작천면의 한 돼지 농가는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5월부터 돼지가 자주 유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흥군 관산면 한우 사육농가는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 1등급 출현율이 과거 80%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피해 호소가 잇따라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조사용역을 의뢰했지만, 지경부에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용역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